

제41화

대부(대출)광고 관련 유의사항 및 소비자 행동 요령



적발·조치

‘20년 중 명함광고,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물 등 불법대부광고 298,937건을 수집·적발

* 시민감시단 및 일반 제보, 감시시스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집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188건의 이용중지 및
인터넷 게시물 5,225건의 삭제를 관계 기관에 의뢰

동향 및 대응 방안

최근 금융회사 사칭 문자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메뚜기식 광고* 성행, 불법대부 유인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

*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번호 또는 게시글을 단기간만 사용후 변경

금융감독원은 향후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감시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

불법대부(대출)광고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1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문자·팩스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
- 2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
- 3 최고 이자율('21.7.7부터 연 20%) 초과는 불법으로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시
- 4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 발생시에는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 5 불법대부광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법률웹사이트)에 신고

2)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

3 최고 이자율('21.7.7.부터 연 20%) 초과는 불법으로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시

4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 발생시에는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5 불법대부광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에 신고

광고를 통해 대부(대출)거래를 하려는 경우 먼저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

1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광고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

이러한 대부(대출)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

※ 파인(fine.fss.or.kr)에서 금융회사 대표번호 확인이 가능하며, 휴대폰에는 '전화 가로채기 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전화를 반드시 유선전화를 이용



2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비상식적 문구 또는 ‘급한불’, ‘지각배’ 등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세요

불법대부광고는 상식을 벗어난 문구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또는
은어(‘급한불’, ‘지각비’, ‘월변’ 등)를 사용하거나
감언이설로 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 불법대부광고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

※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3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이며, '21.7.7. 이후 신규 대출부터는 연 20%를 적용

불법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나, 실제 선이자, 수수료 등을 부과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이자율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산정하며, 대부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

* 단, 대출관련 부대비용인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제외

연 이자는 관련법상 24%(‘21.7.7. 이후 신규대출부터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무효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요구 가능

4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비고금리 초과, 불법채권 추심)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채무자대리인 등)을 받을 수 있음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1332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
(<붙임2> 참조)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5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 등에 신고하세요.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지자체·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 등에 신속히 신고*

* (금감원)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생생 금융인포